

## 기업윤리 브리프스 *Business Ethics Briefs*

### 1. 국제투명성기구 건설부문 부패상황 발표

- 국제투명성기구(*Transparency International*)는 2005년 세계부패보고서(*Global Corruption Report 2005*)를 발간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건설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발표
  - 연간 3조 2천억달러(선진국 GDP의 5~7%, 후진국 GDP의 2~3% 수준)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건설시장에서 시장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
    - 이러한 영향으로 건설부문이 부패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
  - 공공기관의 수많은 허가 및 인가단계, 가격비교가 어려운 특수 건축분야 상존, 다수의 하청업체에 의한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감독의 어려움 등도 부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
  - 건설부문 부패는 크게는 교통시설 및 발전소 건설, 작게는 주택건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수주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
- 이러한 부패는 “건설부문의 비용 상승 - 질 저하”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대비에 소홀함으로써 재해 발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증폭시키는 결과 초래

- 부패는 도로, 항만 등 인프라 서비스의 운영비용을 상승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편 빈곤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어렵게 함
  - 부패한 공사감독관이 뇌물수수 등으로 자연재해와 관련한 건축규제 적용을 묵과함으로써 추후 지진 등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주택붕괴 및 사상자가 크게 증대할 가능성
  - 또한 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
- 건설부문 부패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는 다국적 개발은행(*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*)과 수출신용기관(*Export Credit Agencies*) 등은 부패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제안
- 이에는 부정 및 부패전력이 있는 기업의 건설계약 참여 금지, 건설자재 구매 관련 가이드라인의 엄격한 적용, 재정관리 및 감독의 개선 등이 포함
  - 앞으로도 감독 강화, 내부신고자의 보호장치 보강, 공시제도 개선, 투명성 제고, 민간의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동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
- 국제투명성기구는 건설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계약체결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(*Minimum Standards*)을 발표
- ① 공공기관 및 소속 종업원은 반부패정책 실행을 약속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부패정책에는 부패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함
  - ② 계약상대기관 및 소속 종업원이 반부패정책 실행을 약속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입찰참여를 허용하여야 함
  - ③ 부패행위에 연루된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·유지하여야 하며 동 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입찰을 금지하여야 함

- ④ 입찰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모든 입찰참가자에 대해 계약 절차, 계약조건, 계약자 선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함
- ⑤ 입찰참가자들이 입찰에 대한 사전준비와 필요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
- ⑥ 기업의 대내외 관리 및 감사기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동 기구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
- ⑦ 건설 프로젝트 관련 수요추정, 입찰자 선정, 계약, 관리 및 감독 등 주요 업무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
- ⑧ 기업내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관련 업무에는 담당자들을 일정기간마다 순환·보직하는 등 보호장치(safeguards)를 마련하여야 함
- ⑨ 입찰 및 공사수행 과정을 중립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

□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금년 3월 건설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공사·계약분야 제도 개선 권고안\*을 마련

\*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료 「공사·계약분야 제도개선 권고」 참조

- 권고안에는 하도급제도 개편 및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 등 건설부문 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과 뇌물공여 등 부정행위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
- 아울러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형공사 입찰참가자 선정과정 투명화, 인터넷을 통한 건설공사 관련정보 공개범위 확대, 민자사업 경쟁촉진, 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 등도 권고

# 공사·계약분야 제도개선방안

기본방향	중점 대책	세 부 과 제
건설산업 부패방지 기본조성	공공공사 하도급 체계의 전면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하도급관련 규제철폐 및 업종분류체계의 합리적 개편</li> <li>▪ 직접시공 의무제도 도입</li> <li>▪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</li> <li>▪ 하도급업체 선정절차의 투명성 평가체계 도입</li> <li>▪ 발주자의 지도점검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규정</li> <li>▪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</li> </ul>
	건설산업 전산정보망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건설산업정보망에 정확한 부패통제 관련 정보 구축</li> <li>▪ 상시 부적격업체 퇴출시스템 구축</li> </ul>
	건설공사회계제도의 투명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공공건설공사의 현장별 독립회계 도입</li> </ul>
처벌제도 운영의 실효성확보	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뇌물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통제체계 구축</li> <li>▪ 발주청의 부정당업자 관리 강화</li> <li>▪ 부정당업자 제재 및 경감절차의 투명화</li> <li>▪ 부정당업자 제재 경감기준의 구체화</li> </ul>
	부실벌점제도의 실효성· 투명성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부실벌점 산정방법 합리화</li> <li>▪ 부실벌점 관리절차 구체화</li> </ul>
건설공사 과정의 부패요인 제거	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범위의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인터넷을 통한 건설정보 공개범위 확대</li> </ul>
	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과정의 투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괄·대안입찰 방법 선정절차 개선</li> </ul>
	민 자 사 업 경쟁촉진과 내실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「민자사업 적격성조사」 제도 도입</li> <li>▪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</li> <li>▪ 민자사업 선정시 재정사업과의 비교검토 의무화</li> <li>▪ 사업자 선정 평가체계 개편</li> <li>▪ 단독 응찰사업 유찰제도 도입</li> <li>▪ 민자사업 공사비에 대한 검증 강화</li> </ul>
	지방자치단체 계약절차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</li> <li>▪ 단체장, 지방의원의 영리목적 계약체결 금지요건 강화</li> <li>▪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</li> <li>▪ 부당한 입찰참가제한 및 특약금지원칙 법제화</li> <li>▪ 지방공기업의 지방계약법 적용근거 마련</li> </ul>

## 2. 국내 기업의 기업윤리 동향

□ 한국전력공사의 2004년 윤리경영 추진실적 및 2005년 계획\*

\* 부패방지위원회 제출자료 요약

### 《 2004년중 주요 추진실적 》

◎ 글로벌 스탠다드화한 「윤리경영 시스템」 구축

— 회사 비전·전략과 윤리경영의 연계



— 전략적 윤리경영의 지속적·단계적 추진

1단계	2단계	3단계
윤리경영 도입·확산 (~2003년)	윤리경영 정착 (2004~2005년)	윤리경영 개선·발전 (2006년~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윤리경영 선포식</li> <li>○윤리기준 제정 선포</li> <li>○전담조직 구성·운영</li> <li>○임직원 도덕성 평가</li> <li>○위반신고제도 운영</li> <li>○윤리경영 교육 시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윤리경영시스템 구축</li> <li>○윤리기준 내실화</li> <li>○감독체계 구축</li> <li>○평가·보상체계 확립</li> <li>○신고포상제도 운영</li> <li>○온라인·오프라인 교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시스템 개선·발전</li> <li>○윤리기준 체계화</li> <li>○감독체계 고도화</li> <li>○평가·보상 강화</li> <li>○신고제도 활성화</li> <li>○교육훈련 강화</li> </ul>

- 윤리경영위원회를 확대하고 윤리경영리더를 지정하는 등 윤리경영 감독체계 강화 (2월)
- 공기업 최초로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 협약 체결 (5월)
  - 협약의 주요내용 : 윤리경영체제 확립,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·훈련, 준법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
- 고위회계책임자의 윤리준칙을 제정·시행(6월)한 데 이어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안을 참작하여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개선 (12월)
- 연중 윤리경영 리더를 위한 합숙교육(2박 3일) 시행,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과정 개발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·운영

**윤리경영 교육 실적**

	2003년(A)	2004년(B)	B/A(%)
교육연인원(명)	19,118	20,230	5.8
교육시간(H)	35,154	81,124	130.8
1인당교육시간(H)	1.8	4.0	122.2

- 국내기업 최초로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시행 (6월)

**부조리 신고 포상실적**

신고건수	포상건수	포상금
8건	6건	325,000원

- 사회공헌활동 강화

- 사회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봉사단 구성 (1월)

- 267개 봉사단 5,500명으로 구성하여 노력봉사 위주의 활동 전개

— 2004년중 796회의 봉사활동 실시

— 봉사활동은 재원은 직원모금과 회사지원금으로 조달

○ ‘아름다운 나눔장터’ 행사 실시 (10월)

— 1일 행사수익금 약 2,800만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

◎ 부패발생 원인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

— 부패취약분야 심층진단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명으로 구성된 Task Force 팀 운영 (2월)

○ 8대 분야에서 37개 제도개선과제를 도출(16개 과제 개선완료)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수립

— 직원과 협력업체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압 인입선 및 계량기 부착공사를 지정 협력업체에 전면 위탁 (4월)

— 대내외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외부 자문을 위해 「열린경영혁신위원회」 구성 운영 (6월)

— 환경친화적 경영을 위해 녹색환경자문위원회를 사업소별로 신설·운영 (8월)

— 한전의 반부패 노력이 수범사례로 채택되어 이를 청와대에서 발표 (9월)

◎ 윤리경영 확산 전파

— 신입직원의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“윤리후견인제도” 시행 (3월)

○ 사업소별 윤리경영 리더를 후견인으로 선정

— 윤리경영 표어 및 슬로건을 공모(5월)한 데 이어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설 (9월)

## 《 2005년중 주요 계획 》

### ◎ 윤리경영 실천 계획 수립

- 2005년 목표를 “윤리경영 정착을 통한 윤리문화 선도 기업이미지 획득”으로 설정
- 윤리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
- 협력업체 및 관계사에 대한 윤리경영 지원 강화
- 본사위주의 윤리경영 추진체계를 사업소 중심으로 전환
- 전 업무에 걸쳐 투명경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지속
-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### ◎ 한전 및 전력그룹사 윤리경영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

### ◎ 한국기업윤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리경영 추진사례 발표

## 3. 기업윤리팀 소식

### □ 2005년 3월 24일 17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「기업윤리자문위원회」를 개최

- 위원장, 사무처장, 홍보협력국장, 기업윤리자문위원 9명\*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업윤리팀장 및 담당직원 등이 배석

\* 가톨릭대 조현연 교수, 서울대 박오수 교수, 고려대 문형구 교수, 연세대 김형철 교수, 이화여대 김효근 교수, 유한킴벌리 이덕진 전무, 한국도로공사 정해수 부사장, 금호아시아나그룹 신현식 부사장, 우리은행 김희태 준법감시인

- 자문위원회에서는 기업윤리경영 모델 개발, 윤리경영 필수요건, 기업윤리경영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
  - 기업윤리경영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의견을 수렴을 통한 합의과정이 필수적이며 한국의 관행, 예절, 의식구조 등을 두루 감안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
  -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과 관심 그리고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
    - 특히 기업의 CEO란 최고경영자(*Chief Executive Officer*)일 뿐만 아니라 최고교육자(*Chief Education Officer*)라는 점도 명심하고 윤리경영에 지도력(*leadership*)을 발휘할 필요
  - 세계적인 석학 Peter Drucker는 “기업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부터가 아니라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”고 언급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
    - 이와 관련 최근 기업 경영평가지 사회에 대한 기여도(*social performance*)를 주된 요소로 고려하는 움직임
  - 기업은 정도경영을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노력
    -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의 IR(*Investor Relation*) 보고서를 SR(*Social Relation*)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을 수행한 기업에 대해 평가점수를 가산하는 제도 시행
  - 앞으로는 기업의 경제적 행위에 따른 수익창출규모 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실천여부가 기업의 평판(*reputation*), 주가 등에 반영될 필요

□ 2005년 4월 6일 「정부투자기관 윤리경영협의회」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 개최

- 홍보협력국장, 기업윤리팀장, 정부투자기관\* 실·처장 15명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투자기관 부·차·과장 및 기업윤리팀 직원 배석

\* 한국전력공사, 한국토지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조폐공사, 대한광업진흥공사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석유공사, 농업기반공사, 대한석탄공사, 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관광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

- 회의 결과 정부투자기관의 윤리경영담당부서장 15명으로 구성되는 「정부투자기관 윤리경영협의회」를 구성하기로 합의

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기관\*을 선정·운영함과 아울러 협의회를 실무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담당 실무자급이 참여하는 「윤리경영 실무협의회」도 구성

\* 첫번째 간사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선정

— 협의회는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도 개최

○ 금년중 1차 회의는 6월 23일, 2차 회의는 11월중에 개최할 예정

- 협의회에서는 다음의 사안을 논의할 계획

— 각 기업의 윤리경영 체험사례, know-how 등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

— 협의회 참가기관의 CEO 및 임원 간담회 개최

— 기업윤리자문위원 및 우수민간기업 간부 초청 강의

— 기업윤리경영 관련 워크숍·세미나 개최

- 부패방지위원회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회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